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내년 깎아주는 법인세 13조원… 전체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에 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 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 8조8924억원, 2022년 11조3316억원에서 1.5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6일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800달러(원/달러 환율 1350원 기준 약 108만원)까지 제품을 구매해도 관세를 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된다고 5일 밝혔다.

종전까진 내국인이 출국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600달러까지 기본 면세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술 1병(1ℓ 이하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확대된다. 술은 2병(2ℓ 이하면서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담배와 향수는 기존의 면세 한

도가 유지된다.

### 각자 물려받은 부분에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추진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착수했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과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이 연구 대상이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증여세와의 과세체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각자 취득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현재 상속세를 걷고 있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상속과 관련한 법률·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내년 개편을 목표로 정부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